

동부권 균형 발전 '전주역세권 개발' 급물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구계획 승인 신청·환경영향평가서 제출·주민 의견 수렴 등 마지막 행정절차 돌입

전주 동부권 개발의 핵심축인 전주역세권 개발사업이 마지막 행정절차에 돌입하는 등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전주시는 지난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토교통부에 지구계획 승인을 신청한 데 이어, 지난달 말에는 국토교통부 등에 환경영향평가서가 제출되는 등 지역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자 전주 동부권의 지도를 바꿀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인 '전주역세권 개발사업'이 행정절차의 마지막 관문에 들어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필수 행정절차인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전주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구체적으로 사업시행자인 LH는 오는 6일부터 5월 6일까지 1달 동안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람 공고를 실시하며, 오는 14일에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사업 계획과 환경 대책 등을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시는 공람 공고 게시 및 장소 협조 등 행정적 지원을 통해 주민 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이어 올해 LH가 신청한 지구계획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게 되면, 전주역세권 개발은 실질적인 실행 단계로 진입한다. LH의 사업 추진 로드맵에 따르면, 오는 2027년부터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이후 단지 조성 공사를 거쳐 오는 2034년 준공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된다. 특히 전주역세권은 단순한 주거 단지를 넘어 ΔKTIX 전주역과 연계한 복합 환승 인프라 Δ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맞춤형 임대주택 Δ상업·업무·문화가 어우러진 복합 거점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시는 그동안 서부권에 비

해 상대적으로 개발에서 소외됐던 동부권의 경제 지형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다는 복안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 추진 중인 '전주역 증축 사업'과 시너지 효과를 내, '전주형 균형 발전'의 상징적인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시는 낙후된 전주역 일대가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탈바꿈하면, 인구 유입은 물론 지역 내 생산 유발 효과와 고용 창출을 통해 동부권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앞서 전주역세권 개발사업은 지난 2018년 사업 지구로 지정된 이후 기간 간 의견 차이 등 여러 난제에 부딪혀 표류해 왔으며, 시는 지난 2022년 민선8기 출범 이후 전주역세권 개발을 동부권 발전의 핵심 축으로 보고 사업 정상화를 최우선 과제로 정해 2024년 12월까지 약 2년 6개월간 LH 및 국토부와 수십 차례에 걸친 실무

협의와 정책 조율을 거쳐왔다. 이 과정에서 시는 전주역세권 주변 교통개선을 위한 문제로 LH와 이견이 적지 않았으나, 시민 편의를 최우선에 둔 끈질긴 중재안을 제시하며 사업 정상화의 가장 큰 걸림돌인 교통개선대책을 해결했다. 주요 내용은 전주역 앞 교차로(동부대로) 입체화, 동전주IC 진입로 및 조포대리로 확장 등이다. 그 결과 이번 지구계획 승인 신청을 통해 사업이 본격적인 추진 궤도에 올라서게 됐다. 전주시 관계자는 "2018년부터 오랫동안 멈춰있던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해 지난 2년여간 LH와 치열한 협의를 이어왔다"면서 "사업시행자인 LH와 긴밀히 협력하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 2034년 준공까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와 ㈜전북은행, (사)더숲은 지난 3일 운동목 전주시장 관현대행 부시장과 김은호 전북은행 부행장, 정명운 (사)더숲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6 대한민국 전주정원산업박람회' 기업동행정원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북은행과 '기업동행정원' 조성

전주시-전북은행-더숲, 전주정원산업박람회 연계 조성 협약

전주혁신공원에 (주)전북은행과 함께 만들고, 모든 시민이 함께 누리는 정원이 조성된다. 전주시와 (주)전북은행, (사)더숲(대표 정명운)은 지난 3일 시청 3층 소회의실에서 운동목 전주시장 관현대행 부시장과 김은호 전북은행 부행장, 정명운 (사)더숲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6 대한민국 전주정원산업박람회' 기업동행정원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올해 전주에서 열리는 '2026년 대한민국 전주정원산업박람회'와 연계해 혁신공원에 기업동행정원을 조성, 정원도시 전주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 정원문화 확산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혁신공원에 대한민국 전주정원산업박람회와 연계해 기업동행정원을 조성키로 한 것은 전북현대모터스FC와 (주)포스코이앤씨, 대자인

병원에 이어 전북은행이 네 번째이다. 전북을 대표하는 금융기관으로써 그동안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과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경제 비탈목 역할을 해온 전북은행은 이번 기업동행정원 조성을 통해 지역상생철학을 시민 체감형 공공공간으로 구현한다는 구상이다. 시는 이번 협약에 따라 혁신공원 내 기업동행정원이 들어설 부지를 제공하고, (주)전북은행과 (사)더숲은 기업동행정원을 조성하는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로써 혁신공원은 '2026 대한민국 전주정원산업박람회'와 연계해 '한국군 전통정원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10개 테마정원' '국립정원문화원과의 공동 주관으로 조성되는 '코리아가든쇼 5개소' '△서울시 우효정원(1개소) △기업동행정원(4개소)'이 새롭게 조성된다.

/권희성 기자

검정고시 도전한 전주시 학교 밖 청소년 '꿈' 응원

전주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센터장 정혜선, 이하 전주시 꿈드림)가 검정고시에 도전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꿈'을 응원하고 나섰다. 전주시 꿈드림은 4일 '2026년 제1회 초·중·고 졸업 학력 검정고시'가 치러진 전주기전중학교 교사장을 찾아 시험에 응시한 학교 밖 청소년 100여 명에게 점심 도시락과 응원 물품을 전달했다. 이번 지원은 긴장감 속에서 시험을 치르는 청소년들이 영양을 보충하고 정서적 안정을 얻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기획됐다. 현장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따뜻한 점심 도시락과 문구류, 간식 등이 담긴 응원 꾸러미가 전달됐다. 이에 앞서 전주시 꿈드림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습을 지속할 수 있도록 멘토링 수업과 온라인 강의 지원, 검정고시 교재 지원 등 맞춤형 교육 서비스를 꾸준히 제공해 왔다. 또, 시험 당일에는 매년 도시락 지원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응원을 건넸다. 전주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정성껏 준비한 도시락이 검정고시를 위해 달려온 청소년들에게 작은 위로와 큰 힘이 되었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학교 밖 청소년들이 꿈을 향해 나아가는 길에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권희성 기자

'미래 농업 클러스터' 핵심 기반 구축 본격화

전주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 공동 착공식 가저

전주시가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핵심 거점시설 구축에 착수했다. 전주시는 지난 3일 도도동 건립 부지에서 운동목 전주시장 관현대행 부시장과 전주시의원, 농업인 단체 및 유관기관 관계자, 지역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의 핵심 거점이 될 '전주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 '전주시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의 공동 착공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시가 직접 추진하는 '미래 농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의 본격적인 출발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지역 농산물의 유통·가공 핵심 시설 확보를 통해 지역 농업의 산업화와 경쟁력 강화를 이끄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가운데 '전주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도도동 491-4번지 일원에 오는 2027년까지 국비 15억6000만 원과 도비 10억 원을 포함해 총 9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지상 2층, 연면적 2386㎡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저온저장고와 소분·포장시설, 물류 공간 등을 갖춘 통합 물류 거점으로 기능하게 되며,



전주시는 지난 3일 운동목 전주시장 관현대행 부시장과 전주시의원, 농업인 단체 및 유관기관 관계자, 지역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 '전주시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의 공동 착공식을 가졌다.

현재 월드컵경기장 내 위치한 공공급식지원센터를 이전·확대 운영함으로써 학교급식과 공공급식 전반에 안전한 지역 농산물을 공급하는 '전주푸드' 핵심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의 경우 도도동 488-2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24억6800만 원을 투입해 지상 1층, 연면적 411㎡ 규모로 건립된다. HACCP 기준을 적용한 가공시설과 교육장을 갖추고 내년 상반기 개관에

정인 이 센터는 농업인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주식·분할 등 다양한 가공 상품으로 개발·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농산물 부가가치를 높이고 농업의 산업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시는 두 센터의 건립을 통해 '생산·가공·유통·소비'로 이어지는 먹거리 선순환 구조가 완성돼 농가 소득 증대는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중동발 환위험 속 지역 수출입기업 지키기 나서

전주시가 미·이란 전쟁에 따른 중동지역 불안과 환율 변동성 확대에 대응해 지역 수출입기업의 안전한 외환 거래를 돕고 나섰다. 시는 지난 3일 캠퍼스종합기술원 창업동 1층 첨단누리홀에서 전북지역 수출입기업의 대표와 임직원 등 40여 명을 대상으로 '국제정세 변화 대응을 위한 외환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미·이란 전쟁으로 인해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환율 변동성이 확대된 가운데, 수출입 대금 결제와 해외송금, 외화 자금 운용 등 외환거래 부담과 경영 불안이 커진 지역 기업들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시와 하나은행이 협력해 마련한 행사에서는 △2026년 외환시장 전망 △환리스크 관리 방안 △수출입기업 지원사업 △무역보험공사 지원제도 안내 등 외환 실무에 직접 도움이 되는 내용이 중점 다뤄졌다.

/권희성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과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견인차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선화당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추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주어진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관공각

내아